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2018.11.29.목. 15:30 -18:00

서울 SC컨벤션센터 12층 아나이스홀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KRIHS 국토연구원

후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 프로그램

|             |   |
|-------------|---|
| 15:00-15:30 | 등록 및 자료배포   |
| 15:30-15:35 | 소 개   |
| 15:35-15:50 | 개회사<br>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             | 축 사<b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 15:50-16:30 | 주제발표 1<br>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br>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             | 주제발표 2<br>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방안<br>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
| 16:30-16:50 | 휴식 및 정리   |
| 16:50-18:00 | 토론 및 질의응답<br>좌장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br>토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br>김용수   생활SOC추진단 부단장<br>김미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br>유재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br>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br>조경민   서울산책 대표 |
| 18:00       | 폐 회   |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 목차

---

### 주제발표 1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 1

성은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방안 ..... 22

김태영 | 국토연구원 연구원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 1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성은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2018. 11. 29

AURI 성은영 부연구위원

(aur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 목 차

- I.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추진배경
- II.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방향
- III.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안)
- IV. 지역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활용

##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추진배경



### 윤택해진 경제수준 vs. 삶의 질은 제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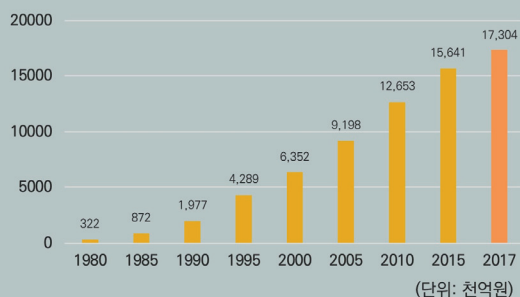


세계 GDP, 2018.10 기준



**11위 / 190개국**

국내총생산(GDP)



▪ 1980 ⇒ 2017 GDP 약 **54배** 증가

UN 행복지수



**57위 / 156개국**

OECD 더 나은 삶 지수



**29위 / 38개국**

삶의 질 종합지수(통계청)



**11.8%** ▲ (06 > 15년)

삶의 질 여론조사(문체부)



**6.4점 / 10점**

- 삶의 만족도 점수 하위
- 가족·공동체 지수 1.4% 감소
- 문화와 여가 점수 최하위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초생활인프라



70세 남성

**복지관에 차 없는 못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히 겨울에 위험해요.  
(경인방송, 2018.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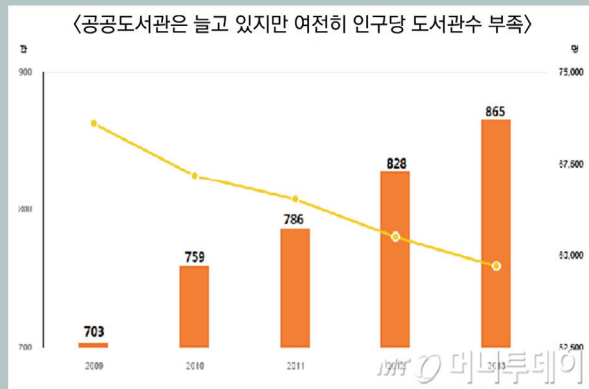


35세 여성

**도서관이 부족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수요는 높아지는데, 도서관과 사서 수는 부족합니다.  
(아시아투데이, 2018.10.22)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 등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수. 문체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공도서관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자료=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35세 여성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해두었는데 28개월이 된 지금까지 **대기순번이 줄지 않아요.**  
(한겨레, 2018.6.8)



42세 남성

동네에 **야구장**이 하나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몰려서 조금 멀더라도 야구장이 많은 **경기도로 가게 돼요.**  
(한국스포츠경제, 2018.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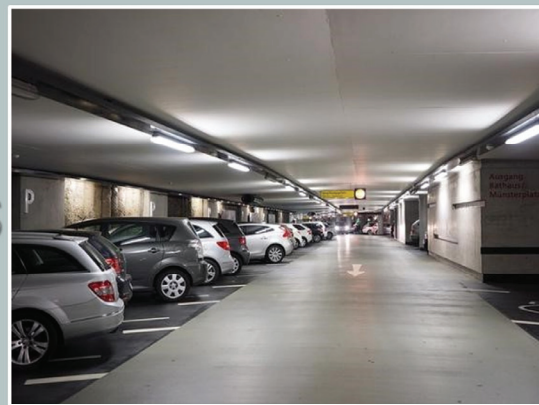


## 특히, 노후저층주거지에는 아파트단지에 비해 취약

✓ 노후 저층주거지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여건 취약



VS



노후저층주택에서 기초생활인프라까지의 평균거리는 **약 2.7km**(AURI, 2013)

아파트와의 시설 만족도 격차는 10년 동안 12%p > 14%p로 오히려 확대(주거실태조사)



## 아파트단지에 비해 열악한 노후주거지



- ✓ 단지화된 아파트에 세대 수 기준으로 설치되는 기초생활인프라



VS



- 국민이 사는 주거지에 **소외됨 없이** 기초생활인프라 서비스 제공 필요

7

## 늘어가는 시설, 향유수준에는 지역 격차



- ✓ 1인당 GNI 3만불 시대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필요

**수도권**에 생활SOC **집중** 분포, **지방 중소도시**는 **열악**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의 **64.7%**가 **비수도권**(<sup>17년 복지부</sup>)  
전시건수의 **55.5%**, 공연예술 횟수의 **65.4%**가 **수도권 집중**(<sup>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sup>)

8

## 사람 중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

✓ 최근 국가 정책목표로 **생활SOC의 전국적 공급 확대** 추진

‘19년 생활SOC 8.7조 투자, ’18년(5.8조) 대비 50% 증가

VIP 공약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재생”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 지원”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찾은 문재인대통령

국민 **누구든지,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받아야 하는  
생활서비스의 공급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

9

##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 국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역할

**#사람중심** 생활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

**#국민총행복** 국민총행복(GNH)이 국내총생산보다 중요  
18.10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도시유형별 행복지표 공동개발 추진

**#모두를 위한 도시** 사람과 장소에 대한 투자 필요  
OECD, 도시 차원의 웰빙과 포용성에 관한 주요 지침 제시

10

## 다양한 수요를 실현할 공간서비스 기준 부재



### 복지기준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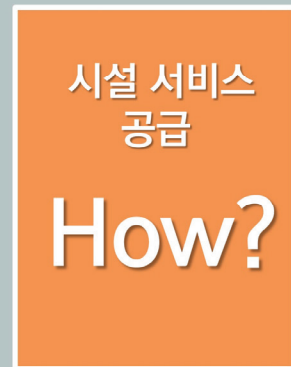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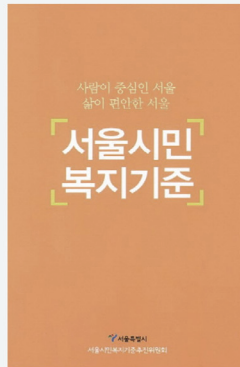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11년 서울시장 공약  
- 시민복지기본선

#### 원리

- 기본선의 수준
- 보장의 책임 주체
- 재원의 부담방식
- 주요 적용 대상
- 권리와 성격
- 제도의 운영 원칙

#### 부문

- 소득기준
- 주거기준
- 돌봄기준
- 건강기준
- 교육기준



11

## II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안) 재정비 방향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란?

-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기준
- (도시재생법)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예시) 교통·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공동작업장, 화장실·수도,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포함하여 10년 단위(재검토 5년)로 수립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적용범위
- 도시재생사업지 뿐만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도시 및 농촌(읍면) 포함**

13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배경



### ✓ 기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대한 반성

- 도로, 공동이용시설 등 대단위 시설, 특정 공공시설에 집중되어 **실제 주민 생활편의와 만족도** 증진에 한계
-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예) 1곳/3천명 기준을 제시하여 **저밀지역(지방도시)에 적용 곤란**

### ✓ 변화되는 기초생활인프라 정책

- 도시재생 뉴딜사업('17.12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추진**
- 생활 SOC 공급확대 정책('18.8월)
  - 최근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 공급을 위한 **공통기준 추진**



14

## 국정 비전을 고려한 최저기준의 수립 방향



- ✓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등 **국민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 **지역거점시설**과 **마을단위시설** 구분
  - ✓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의료, 돌봄, 생필품구입 등에 관련한 **민간시설** 포함
  - ✓ 보편적인 서비스이므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국가적 최저기준 제시**
    - 수요자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1인당 시간 거리**를 제시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공급단계에서 교통,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완**
- ➡ 인구밀도, 재정,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실질적인 공급기준 마련**

15

## 최저기준의 적용 범위 및 도출 전제



- ✓ **적용범위** : 국토의 체계적 개발, 보전, 관리 추진되는 도시지역(읍면소재지 포함)
- ✓ **최저기준 도출의 전제**
  - 주민이용 편의, 공급비용 대비 이용가능성, 예산제약 등을 고려 **적소공급**을 지향, 과다공급 방지
  - **지역거점시설** : 거점에 공급되는 대규모 시설로서 **공급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량**을 통해 접근
  - **마을단위시설** :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도보**를 통해 접근가능한 저차 서비스 시설



| 구분            | 공간위계                             | 공급목적            | 공급주체                   | 규모  | 서비스 위계 | 기능복합                    |
|---------------|----------------------------------|-----------------|------------------------|-----|--------|-------------------------|
| <b>지역거점시설</b> | 소생활권<br>(국계법상<br>도시기본계획)         | 낙후지역<br>개선      | 공공                     | 대규모 | 고차     | 대규모 복합시설<br>(도시커뮤니티센터)  |
| <b>마을단위시설</b> | 마을<br>(지속가능한 신도시<br>계획기준 상 근린권역) | 아파트 수준<br>편의/복지 | 공공 우선<br>투입<br>(민간 고려) | 소규모 | 저차     | 소규모 다기능시설<br>(마을커뮤니티센터) |

16

## 국가적 최저기준의 도출 방법

- ✓ **정책적 목표수준 설정** : 현재 도시주민의 향유 수준과 국민의 희망 수요를 고려
  - (도시 거주민의 향유수준 조사) 생활 SOC 향유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인구를 누적하고, 전체 90% 지점을 현재 향유수준으로 간주 [국민의 90%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
  - (국민의 희망수요) 국민 약 2.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국민들의 시설별 희망 시간거리 조사

| 구분      | 향유 수준<br>(공급 현황)                |          |          | 기존<br>기준                      | 설문조사                 |          |     | 참고수준                      |
|---------|---------------------------------|----------|----------|-------------------------------|----------------------|----------|-----|---------------------------|
|         | 등급                              | 구간<br>한계 | 시간<br>거리 |                               | 실제 이용현황              | 장래수요     |     |                           |
|         |                                 |          |          |                               |                      | 평균       | 최빈값 |                           |
| 사용지표    | 각시설별 자료 분석                      |          |          | 국가적<br>최저기준<br>(도시재생<br>기본방침) | 대국민 설문조사<br>(2,432명) |          |     | 국내외 정책 기준/<br>통계          |
| 자료특성    | 1인당 평균 접근거리                     |          |          | 인구 수/도시<br>규모                 | 시설 이용자의<br>이동거리 평균   | 희망거리 평균  |     | 다양                        |
| 기준설정 방향 | 공공공급 추진 여부를 고려<br>하여 격차발생 지점 도출 |          |          | 최대한 반영                        | 시설별, 지역별,<br>연령별 평균값 | 접근거리 희망값 |     | 이동거리에 대한<br>기준치, 통계 근거 활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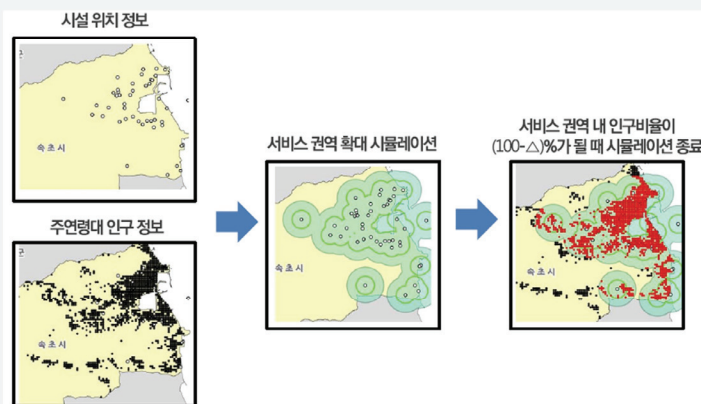
17

## 공급현황 : 국민의 기초생활인프라 향유 수준

- ✓ 각 개인의 거주지 근린에서 최단거리 시설까지의 접근거리 분석 : 전국 시설별 격차맵

지역거점

500x500m 격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수준 진단지표(SL)를 식으로 정의



$$SL=f(TPop, CLS)$$

TPop: 시설별 총 수요인구  
CLS: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 활용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원시자료(500x500m 단위 연령별 인구정보, 생활인프라 위치)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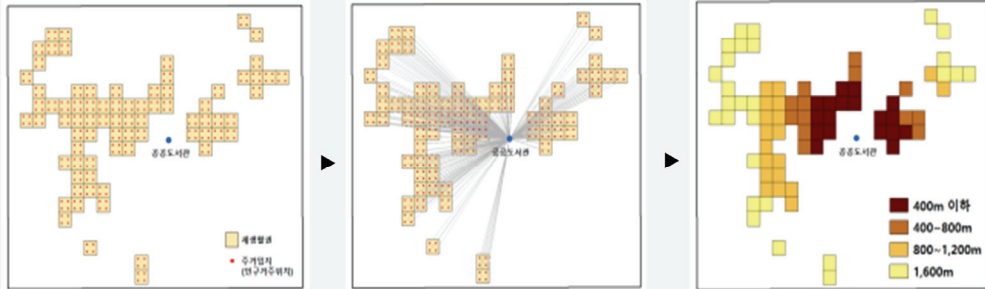
## 공급현황 : 국민의 기초생활인프라 향유 수준



- ✓ 각 개인의 거주지 근린에서 최단거리 시설까지의 접근거리 분석 : 전국 시설별 격차맵

마을단위

각 시설별 접근거리를 전국 10등급으로 구분하여 한계거리 및 해당 인구 산출



- 도시지역 대상 5명 이상 거주 지역을 200x200m 셀로 격자화: 전국 총 26만개 근린
- \* 단, 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 등 이용 연령층이 명확한 경우 대상 계층만 적용
- 최단거리 산출에는 유클리드 거리 기준 적용

- 활용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원시자료(100x100m 단위 연령별 인구정보), 디비리아 사업자주소, 국가도서관통계 등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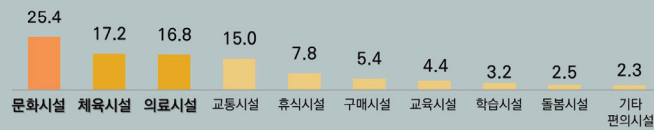
## 이용현황 및 장래수요: 국민의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및 희망수요



### ✓ 대국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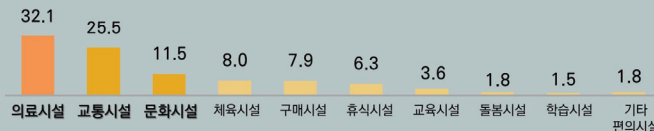
[ 거주지 근접 위치 희망 시설 ]

- 문화시설 25.4%, 체육시설 17.2%, 의료시설 16.8% 순



[ 일상생활 시 필요시설 ]

- 의료시설 32.1%, 교통시설 25.5%, 문화시설 11.5% 순



- 전국 지역별 표본할당
- 성인 2,432명 대상 조사(20~70세)
- 시설 이용현황 및 적정 시간거리 수요, 만족도, 시설 우선순위 파악

20



### III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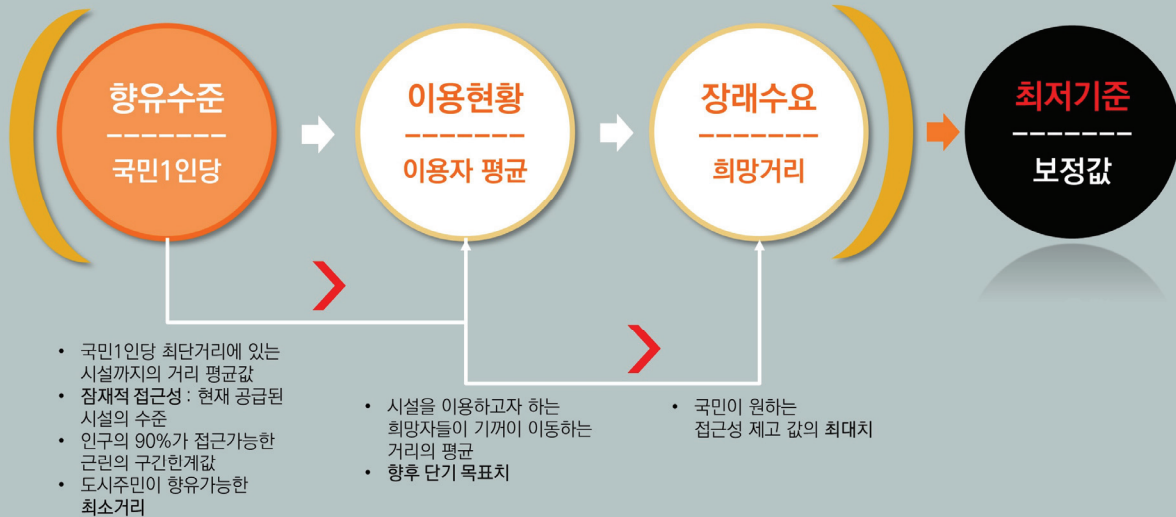
| 부문            | 기초생활인프라      | 국가적 최저기준(안)  | 생활권 규모        |                 |            |
|---------------|--------------|--|---------------|-----------------|------------|
|               |              |  | 대<br>(5만명 이상) | 중<br>(2만 ~ 3만명) | 소<br>(1만명) |
| 교통시설          | 공공주차장        | 주거지역 내 주차장확보율 : 70%<br>· 시지역 1대/주택규모 85㎡<br>· 군지역 1대/주택규모 95㎡  |               |                 | ○          |
| 공간시설          | 생활권공원        | 1인당 공원 면적 9㎡   |               |                 | ○          |
|               | 근린광장         | 2,000 ~ 4,000세대당 1개소   |               |                 | ○          |
| 유통·공급시설       |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 100%   | ○             | ○               | ○          |
| 공공·문화<br>체육시설 | 유치원          | 2,000~3,000세대당 1개소   |               |                 | ○          |
|               | 초등학교         | 4,000~6,000세대당 1개소<br>학급당 학생수 : 21.5명                          |               |                 | ○          |
|               | 공공체육시설       |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 : 4.2㎡   |               |                 | ○          |
|               | 도서관          | · 지역거점도서관:인구 3만명당 1개소<br>· 작은도서관:500가구 이상 1개소<br>(건물면적 33㎡ 이상) |               | ○               | ○          |
|               | 노인의료<br>복지시설 | 인구 3만명당 1개소  |               | ○               |            |
| 방재시설          | 저류시설         | 목표연도 내 확률강우량을 결정 후 필요<br>저류시설 확보                               |               | ○               |            |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하수도 보급률 100%   | ○             | ○               | ○          |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 ✓ 현재 도시주민의 **향유수준**과 국민의 **희망수요**를 고려하여 **보정치** 도출

- (지역거점시설) **향유수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공급 부담 완화
- (마을단위시설)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구간 값**으로 보정



23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 ✓ **지역거점시설** : 지역중심지에 설치되는 대규모, 고차 서비스 시설

| 시설              | 세부시설                     | 최저기준  |
|-----------------|--------------------------|-------|
| 공공거점도서관         | 국립도서관<br>(지자체, 교육청 설립포함) | 차량25분 |
| 공공문화시설          | 문화예술회관                   | 차량20분 |
|                 | 전시시설                     |       |
| 공공체육시설          | 경기장                      | 차량10분 |
|                 | 체육관                      | 차량15분 |
|                 | 수영장                      | 차량30분 |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차량30분 |
| 보건소             |                          | 차량20분 |
| 종합병원응급의료기관      |                          | 차량20분 |
| 지역거점공원 (10만㎡이상) |                          | 차량10분 |



국립/시립/교육청 도서관



시립 문화예술회관

24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 **지역거점시설** (인구90%가 이용가능한 최단거리 시설 향유 수준을 고려, 이용현황/장래수요로 보정)

(공공도서관 예시)



(노인복지관 예시)



25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 **마을단위시설** : 도보권에서 이용 가능한 주민의 생활필수시설

| 시설        | 세부시설                       | 최저기준      |
|-----------|----------------------------|-----------|
| 마을주차장     |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시설주차장         | 도보 10분    |
| 마을도서관     | 공공거점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 도보10~15분  |
| 어린이집      | 국공립 및 민간                   | 도보5분      |
| 유치원       | 국공립 및 민간                   | 도보 5~10분  |
| 초등학교      | -                          | 도보10분     |
| 마을 노인복지시설 | 노인교실                       | 도보 10분    |
|           | 경로당                        | 도보 5분     |
| 생활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 도보 10~15분 |
| 근린공원      | 도시공원                       | 도보 10~15분 |
| 의원        | 1차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 도보 20~25분 |
| 약국        | -                          | 도보 15~20분 |
| 소매점       | -                          | 도보10분     |
| 기타 생활편의시설 | 무인택배함, 쓰레기분리시설 등           | 도보5분      |

26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 **마을단위시설** (인구90%가 이용가능한 최단거리 시설 향유 수준을 고려, 이용현황/장래수요로 보정)

(공원 예시 : 근린공원 전체)



• 보행 지속 3km 이동 전제

• 시설이용자들의 실제 이동시간 평균

• 장래 시설의 서비스 수준 제고 희망시간

(의원 예시 : 의원, 한의원, 치과 포함)



27

## Ⅳ. 지역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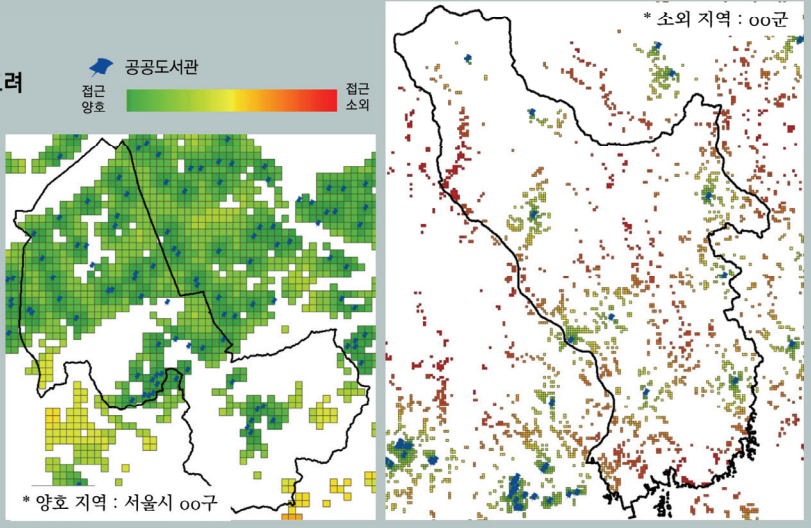
#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공급계획 수립

## ✓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역별 인구밀도 및 공급현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급 전략 수립
- 지자체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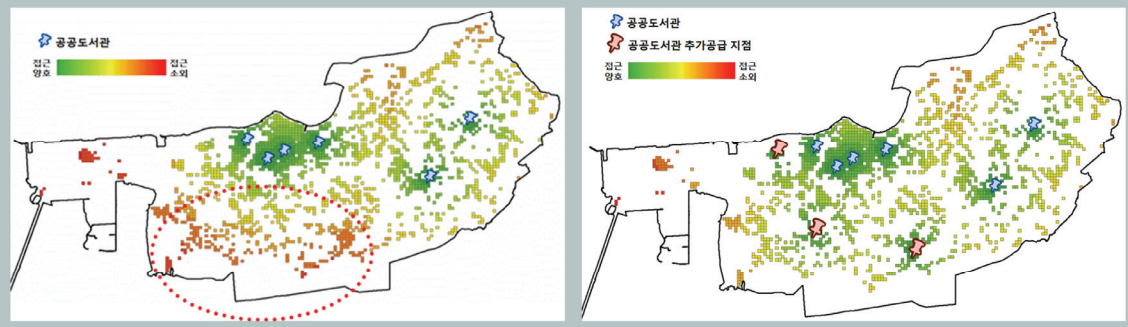
## ✓ 국가적 최저기준 및 주변 지역고려 지역 내 향유수준 격차분석

- 시설 별 전국단위 향유 수준 격차 맵 제공
- 편의상 행정구역에 따른 수준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주변의 최단거리 시설 분석 포함



#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공급계획 수립

## ✓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 추진 후 접근성 개선효과 검토



| 공공도서관 개소 수  | 평균 접근성  | 접근성 거리 개선률(%) | 소외지역 수 (8~10등급) | 소외지역 감소율 |
|-------------|---------|---------------|-----------------|----------|
| 6 (현재)      | 3,566 m | -             | 232             | -        |
| 9 (3개 추가공급) | 2,592 m | 27.3          | 39              | -83.2%   |

## 공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 인구밀도

-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 동시에 시설의 **수용능력(용량)**도 고려
-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 :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 **유희시설 현황** 고려 **신규공급계획 수립**
-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입지효율화**를 추진,  
수요자응답형 교통 등 **전달체계 개선**을 동시에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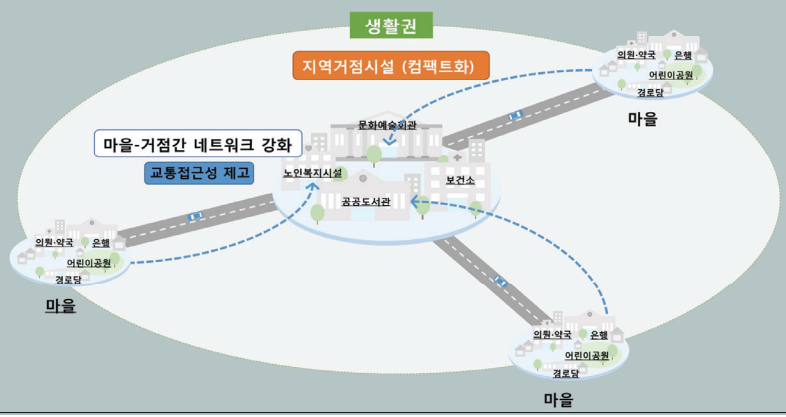
| 구분    | 고밀        | 중밀                  | 저밀              |
|-------|-----------|---------------------|-----------------|
|       | 대도시       | 중소도시                | 소도시·농촌지역        |
| 인구 규모 | 50만 이상    | 10만 이상              | 10만 미만          |
| 고려사항  | 최소거리 + 용량 | 최소거리 +용량<br>유희시설 고려 | 입지효율화 +<br>전달체계 |

31

## 공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 입지조건

-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하는 **컴팩트-네트워크** 방식 도입
- 소 생활권을 거점으로 공간구조, 교통, 기반기반시설이 계획·조성되었으므로  
마을은 지역 거점의 중심 기능을 이용하고 기초적 생활을 지원하는 하위 시설로 연계
- 신규 공급의 경우, 주변 **유희시설**을 확인하여 필요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검토
- 신규 공급의 경우, **소규모 다기능시설(복합화)**를 기본으로 하여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 저밀지역의 경우, 인근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우선 공급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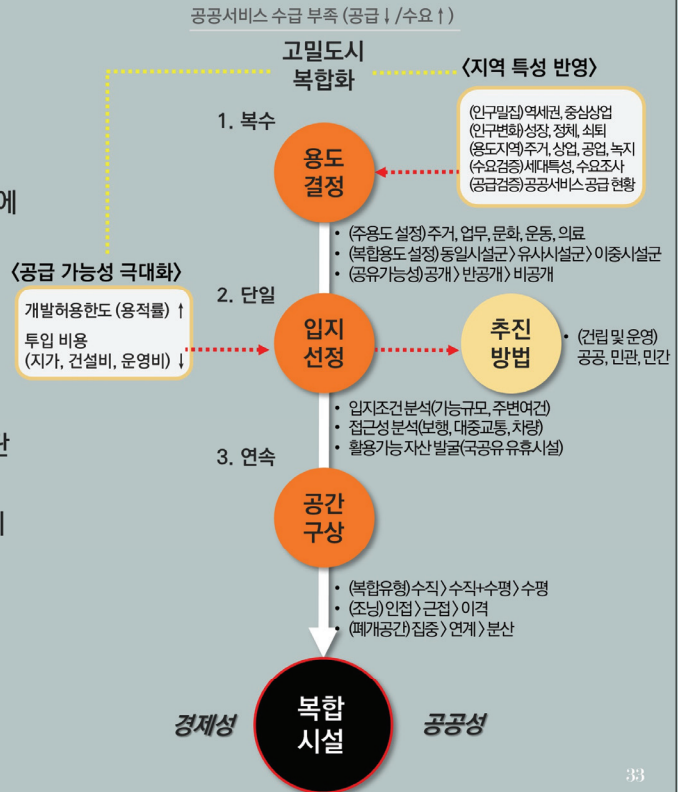
## 공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 시설의 규모 : 지자체 여건 고려

- 인구당 향유면적, 지역수요 등을 고려
- 공급시설의 **소관부처 기준** 검토
- 설립 조성, 운영비(인건비, 시설비) 등에 대한 **연간소요, 예산계획**

### ✓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 주체 고려 : 지자체 직영,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활용
- **주민중심의 운영조직**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을 위한 노력
- 운영비용 :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를 원칙
- 시설사용료, 수익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의 기반 마련



33

## 일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 수립 절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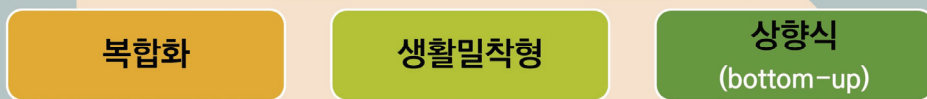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플랫폼으로 부처 연계 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복합 공급이 가능한 부처별 사업의 연계방안을 마련
- 부처 간 MOU를 통해 집중 공급



- '17년 ~ '18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167곳)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 신속 지원 추진
- 신규 뉴딜사업 선정 시 생활SOC 부족지역을 우선 선정, 생활SOC 집중 공급
- 도시재생지역외 생활SOC의 공급 필요지역내 개별 생활SOC 사업 ☞ 도시재생사업 인정

### ✓ 생활SOC방향 기조 = 도시재생사업 방향



35

##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과 부처 협력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사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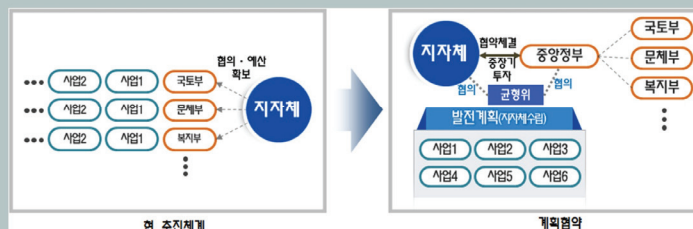
- 생활 SOC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개별 생활SOC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도시재생법 개정 추진)
- 공공기업의 도시재생지역에서 생활 SOC 공급시, 기금 저리융자, 공공임대상가(건설·매입형)를 활용
- 편의점 등 민간이 공급하는 생활 SOC도 공급 추진

### ✓ 복합시설의 공급 : 거점지역 및 마을단위

- 국토부, 지자체 및 LH간 협업을 통해 뉴딜사업지에 복합시설을 건설, 소관 부처에 분양 범부처 참여
- \* 국공유지 활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빈집매입 등 다양한 공급방안 추진

###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시 적극 지원

- 지자체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사업을 발굴
- 중앙정부 : 계획수립 지원 및 범부처·다년도 협약을 통해 안정적 지원



36



감사합니다

Q&A



(aur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 2

#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방안

김태영 | 국토연구원 연구원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연구원 KRIHS  
도시재생연구센터

#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방안

2018. 11. 29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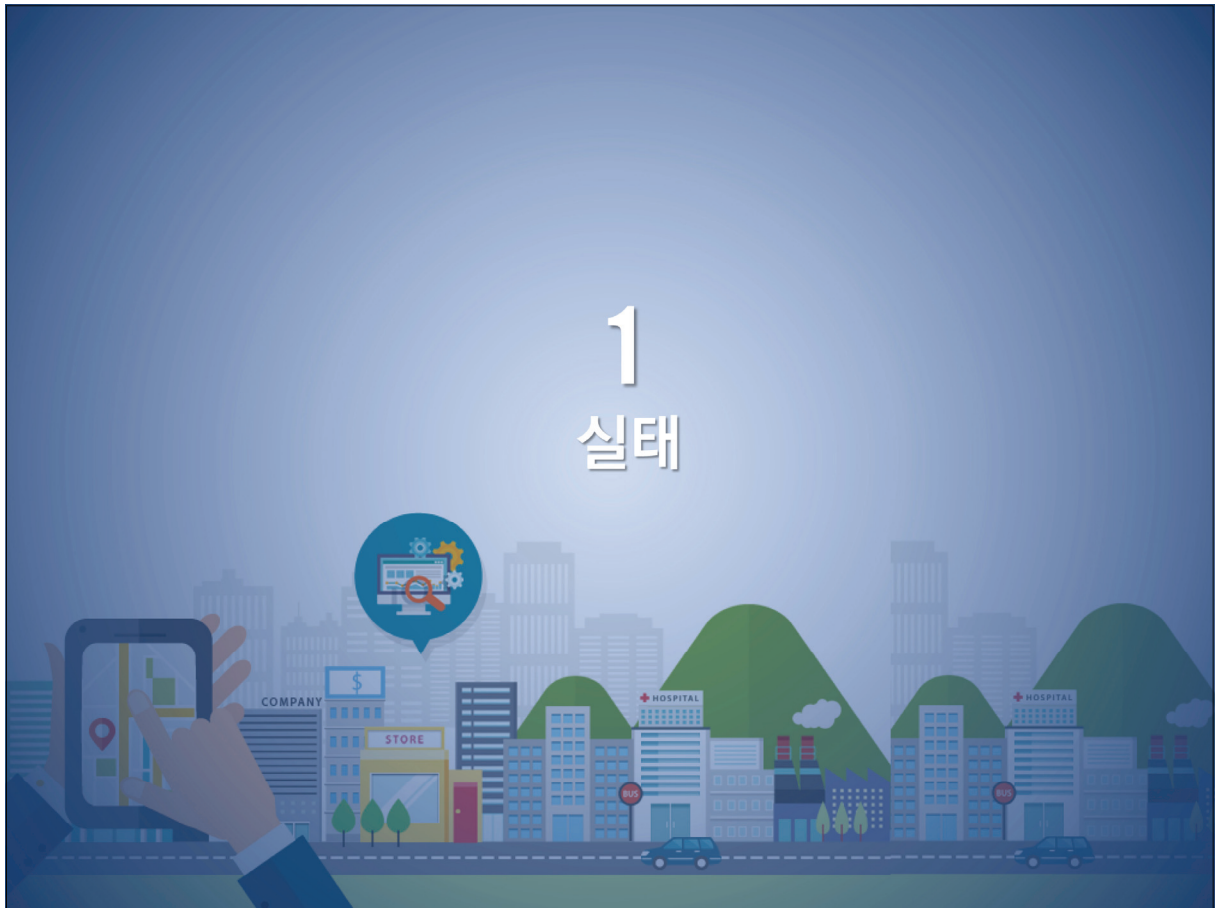
김 태 영



## 차 례

- 01 실태
- 02 해외 정책 사례
- 03 우리 정책
- 04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 05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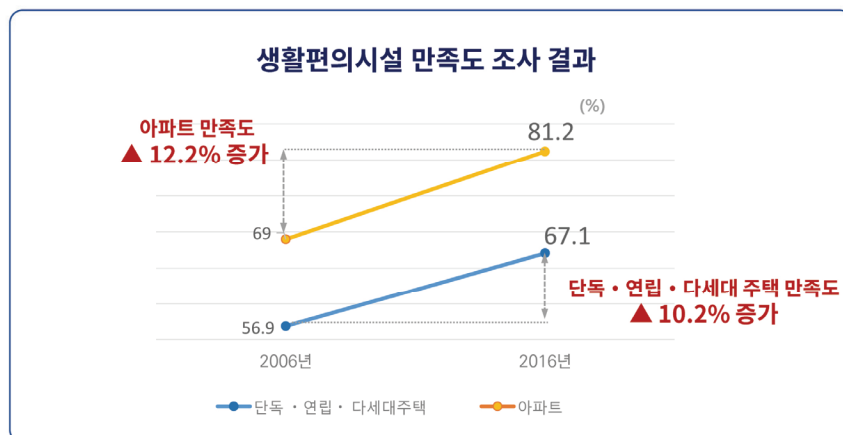
# 1 실태

## 주거지 실태. 주거환경 격차 확대

“생활인프라 공급 격차로 **정주만족도 격차 심화**”

주거만족도  
격차 심화

저층주거지 거주자는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생활편의시설 만족도가 낮음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만족도는 10.2%p 증가, 아파트 만족도는 12.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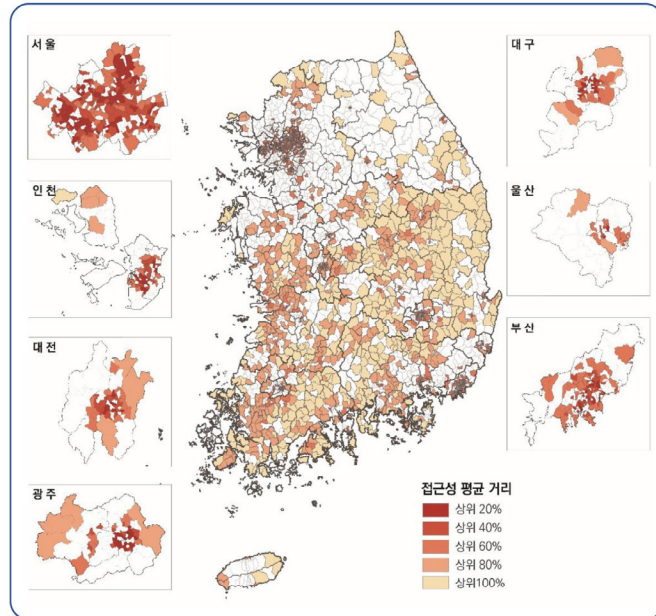


## 지역 실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편차 존재

### “도시규모별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상이”

####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편차

- 쇠퇴판정을 받은 읍면동(2016년 기준) 중 도시재생 및 유관사업이 미선정된 읍면동의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도시규모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및 특·광역시 내 쇠퇴지역의 평균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은 상위 20~4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
- 지방 쇠퇴지역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보임



\* 자료 :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쇠퇴지역 실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양극화 현상

### “쇠퇴지역 읍면동 간에도 접근성의 지역별 편차가 현저”

####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양극화

- 서울, 경기 등 수도권내 읍면동은 인구 및 사업체수 감소, 높은 노후 건축물 비율 등으로 쇠퇴판정을 받았을지라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함
- 반면 쇠퇴지역 중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하위20%에 속하는 읍면동 비율은 특·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  
 \*경북(33%, 128개동)·전남(20%, 79개동)·경남(18%, 71개동)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남

| 시도    | 기초생활인프라 평균 접근성 상위20%지역 |        | 시도    | 기초생활인프라 평균 접근성 하위20%지역 |        |
|-------|------------------------|--------|-------|------------------------|--------|
|       | 읍면동수                   | 비율     |       | 읍면동수                   | 비율     |
| 서울특별시 | 148                    | 38.34% | 서울특별시 | 0                      | 0.00%  |
| 부산광역시 | 30                     | 7.77%  | 부산광역시 | 0                      | 0.00%  |
| 대구광역시 | 37                     | 9.59%  | 대구광역시 | 0                      | 0.00%  |
| 인천광역시 | 38                     | 9.84%  | 인천광역시 | 1                      | 0.26%  |
| 광주광역시 | 26                     | 6.74%  | 광주광역시 | 0                      | 0.00%  |
| 대전광역시 | 12                     | 3.11%  | 대전광역시 | 0                      | 0.00%  |
| 울산광역시 | 4                      | 1.04%  | 울산광역시 | 0                      | 0.00%  |
| 세종특자시 | 0                      | 0.00%  | 세종특자시 | 0                      | 0.00%  |
| 경기도   | 65                     | 16.84% | 경기도   | 7                      | 1.81%  |
| 강원도   | 3                      | 0.78%  | 강원도   | 20                     | 5.18%  |
| 충청북도  | 6                      | 1.55%  | 충청북도  | 24                     | 6.22%  |
| 충청남도  | 4                      | 1.04%  | 충청남도  | 24                     | 6.22%  |
| 전라북도  | 2                      | 0.52%  | 전라북도  | 29                     | 7.51%  |
| 전라남도  | 6                      | 1.55%  | 전라남도  | 79                     | 20.47% |
| 경상북도  | 4                      | 1.04%  | 경상북도  | 128                    | 33.16% |
| 경상남도  | 1                      | 0.26%  | 경상남도  | 71                     | 18.39% |
| 제주특자도 | 0                      | 0.00%  | 제주특자도 | 3                      | 0.78%  |
| -     | 386                    | 100%   | -     | 386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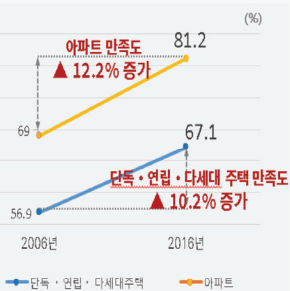
\* 자료 :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주요 이슈. 기초생활인프라 불균형

주거유형별·지역별·쇠퇴지역 간 **만족도 차이·편차·양극화** 현상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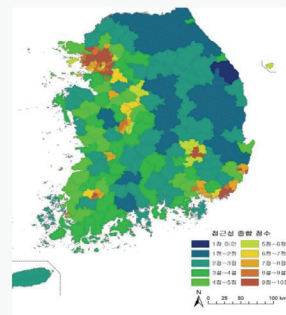
### 주거유형간 생활편의만족도 차이 심화

저층주거지는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생활편의시설 만족도가 낮으며, 차이 또한 심화



###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수준의 지역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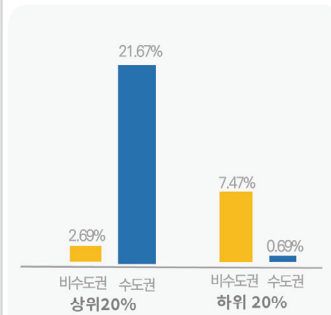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수도권 및 특·광역시에는 양호, 일부 광역도는 열악, 지역별 편차 현상 발생



\* 자료 : 임은선 외, 2018.10.12.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연구원'

### 기초생활 접근수준의 쇠퇴지역 간 양극화

쇠퇴지역간에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열악한 등, 접근성의 지역별 편차가 현저



\* 자료 :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2 해외 정책 사례





## 독일 : 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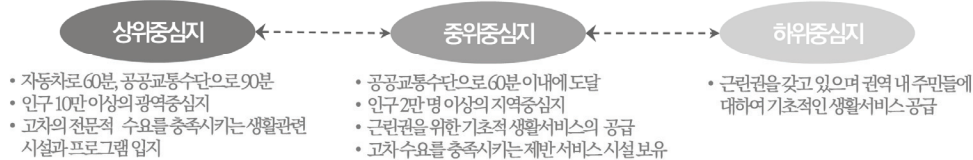
### 개요

\* 자료 :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등가치적 생활여건’ 개념의 근간, 「국토계획법(ROG)」 제정(65)
  - 제2조에 국토계획의 목표를 독일 전체의 생활조건이 ‘최소한 동일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 ‘등가치적 생활여건’ 개념의 근간을 마련
- 등가치적 생활여건의 보장, 「연방국토계획프로그램」 수립(75)
  - 전국을 대도시 과밀지역, 농촌지역, 낙후지역, 국경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안고 있는 문제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
  - 4개 유형 지역의 구체적인 계획의 입안과 집행을 위하여 전국을 38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단위지역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갖는 중심지 하나 이상을 포함하거나 그런 중심지를 개발해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함

### 주요 내용

- 거점 기준, 생활기반시설을 전국 균등 배치, 거점과 인근 지역이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림



-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존배려 지역전략(Regionalstrategie Daseinsvorsorge)’ 추진
  -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악화를 방지
  - 적정 교통수단을 통해 시설로의 접근성을 보장, 주민들에게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영국 : 농촌서비스 기준



### 개요

\* 자료 :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1990년대 농촌 지역의 다양한 문제가 대두,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농촌서비스기준 작성
  - 2000년에 ‘살아있는 농촌’, ‘일하는 농촌’, ‘보존(보호)되는 농촌’, ‘활력 있는 농촌’ 등 4가지 농촌발전 비전을 제시한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
  - 어떤 지역에서도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서비스의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의미

### 주요 내용

- 부문별 서비스 유형과 공급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상위거점(urban), 중위거점(town and fringe), 하위거점(village), 최하위 기초거점(hamlet and isolated dwellings) 등 지역 규모에 따라 공급되어야 할 생활기반시설 및 프로그램의 차별화
  - 서비스의 공급기준은 단일 척도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유형, 특히 전달체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정
- 농촌서비스기준의 범위는 2000년 도입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간소화
  - (00년) 14개 부문 - 35개 기준, (04년) 11개 부문 - 33개 기준, (06년) 8개 부문 - 11개 기준으로 대폭 축소
  - 농촌서비스기준은 2006년 업데이트를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는 서비스 기준 설정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

## 일본 : 입지적정화계획

### 개요

\* 자료 :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한 콤팩트+네트워크 국토구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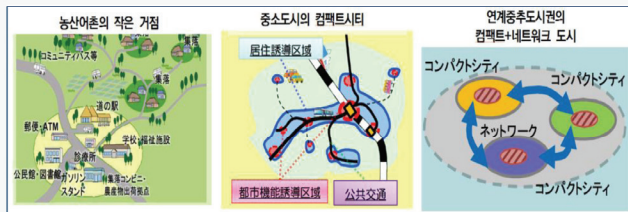
- 향후 30년간 인구의 약 80% 수준 감소 예상. 생활서비스(의료·복지 등) 공급 축소와 지자체 재정 악화, 공공기반시설 유지 어려움
- 고령자·육아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재정·경제·재해 측면의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필요성 대두
- 지방도시 지속가능 경영 추진 정책수단 마련(관련 3법-도시재생특별조치법, 중심시기지활성화법, 지역공공교통재생법- 개정·시행)

### 주요 내용

#### • ‘입지적정화계획’(立地適正化計画) 제도 개념, 지역공공교통재생실시계획 마련·추진(도시재생특별조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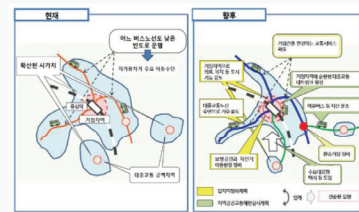
- (Compact) 인구밀도와 서비스 유지 목적 거주유도구역 + 의료·복지·보육·상업 등 서비스 제공 도시기능유도구역
- (Network) 구역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망 형성 및 정시성 확보, 구역내 보행/자전거 접근·편의성 확보
- (정책 지원) 유도시설 세제 혜택, 계획인센티브, 주차장·교통시설 정비(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공유재산 활용·재배치

일본 국토형성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형 국토구조 추진 개념



\* 자료 : 국토交通省, 2015, 国土形成計画 (全国計画) (概要)

입지적정화계획에 따른 도시공간 전·후 비교



\* 자료 : 국토交通省, 2015,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について

## 3 우리 정책



## 정책 소개 : 도시재생 뉴딜 (국토교통부)

비전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

\* 자료 : 국토교통부

정책  
목표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3대  
추진전략

도시공간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지역 주도

5대  
추진과제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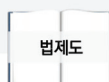


상가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지역주도 뉴딜사업 추진  
지역 주도 맞춤형 선정,  
사업관리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법·제도 정비  
도시재생법 개정,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공적 재원의 효율적 운용  
재정 투입(연2조원), 기금 지원(연4.9조원),  
공기업 투자(연3조원)

도시재생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안)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

13

## 정책 소개 : 도시재생 뉴딜 (국토교통부)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 자료 : 국토교통부

노후 저층 주거지에 마을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국가최저기준 정비·지원

<목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전략 마련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저층 주거지 주거 만족도 제고  
16년 67%→22년 75% 이상

<노후주거지 도시재생개념도>



도시재생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안)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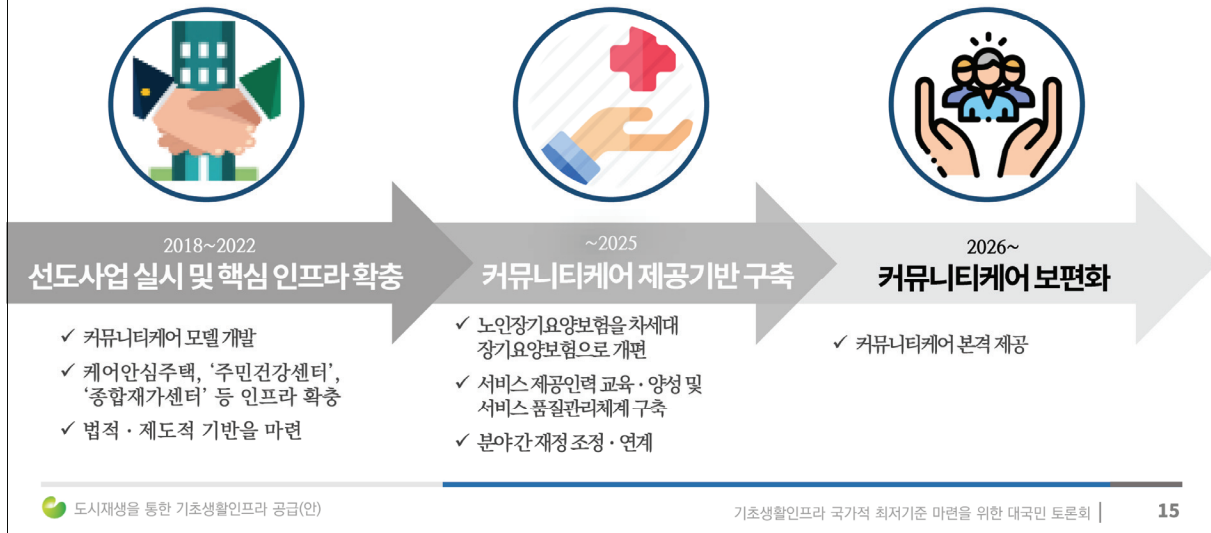


## 정책 소개 : 커뮤니티케어 (보건복지부)

\* 자료 : 보건복지부

### 20대 국정전략 설정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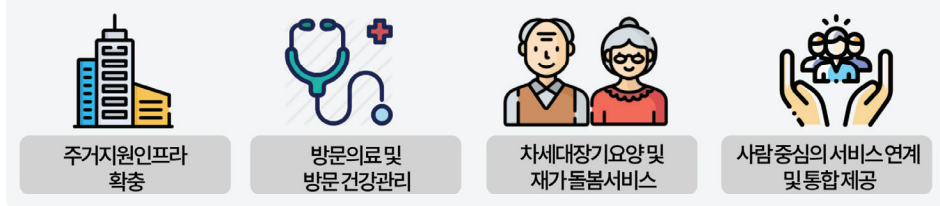
####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



## 정책 소개 : 커뮤니티케어 (보건복지부)

\* 자료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 과제



도시재생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안)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

16

## 정책 소개 : 생활SOC 추진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추진

\* 자료 : 기획재정부

###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 정책 방향

##### 국민 삶의 질 향상

- ✓ 위라벨 확산, 주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로 삶의 질 관심
- ✓ 문화, 건강, 관광 등의 인프라, 생활편의시설 구축

#####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 구도심 쇠퇴, 노후산업단지의 근무여건 악화, 농어촌 활력감소
- ✓ 거주여건 개선, 농어촌 소득증대,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정책지원

#####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 ✓ 미세먼지, 각종 안전사고 등 일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 차원
- ✓ 미래 생활환경변화에 선제적 대비

#### 분야별 투자 과제

##### 여가및건강활동

-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도 편리한 체육시설 10~15분내 접근 문화·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주민복합공간
- 지역 관광 인프라  
지역 문화자원 정비 및 자연관광자원 활성화

##### 지역활력

- 도시재생  
도시재생 로드맵 추진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어촌·어항 연계 개발 및 낙후시설 정비
- 스마트 영농  
농축수산업 분야 스마트 ICT 기술 적용
- 노후산업단 재생·스마트 공장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량, 근로환경 개선 및 시설 고도화

##### 생활안전 및 환경

- 복지시설 기능 보강  
주거생활권·삶의 질 제고
- 생활안전 인프라  
재난, 안전사고 예방시설 강화
- 미세먼지 대응  
도시내, 근교에 숲 조성 및 친환경 차량 보급·확산
- 신재생 에너지  
소규모 농가·협동조합

도시재생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안)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

17

## 정책 소개 : 생활SOC 추진 (국무조정실)

### 생활SOC 10대 과제

\* 자료 : 기획재정부



####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

- ✓ 노후 공공도서관(60%) 휴식 및 소통공간으로 리모델링
- ✓ 체육센터(100%), 작은 도서관(28%) 설치



#### ‘지역 주변 볼거리와 즐길 거리 활성화’

- ✓ 지역 내 문화, 역사 콘텐츠 인프라 구축
- ✓ 첨단콘텐츠 등 박물관, 과학관, 전시시설 보강, 캠퍼스, 생태공원 확대



#### ‘도시재생 1조5천억원 투자’

- ✓ 구도심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168개소 (신100개소) 추진
- ✓ 도시재생 로드맵 추진 속도 제고



####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 ✓ 어촌, 어항 연계·통합개발, 70개소 ‘어촌뉴딜’ 추진
- ✓ 농촌마을 1300여개에 생활인프라 개선, 기반시설 정비



#### ‘농업과 어업·축산의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 ✓ 스마트 ICT 기술 활용 농·어·가 생산성 향상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 ✓ 산업단지내 근로환경개선, 경쟁력 강화
- ✓ 청년친화형 산업 확대, 노후산업단 기반시설 정비, 스마트 공장 확대



#### ‘사회복지·보건시설 기능 보강’

- ✓ 취약계층 거주·훈련 시설 보수
- ✓ 장애인, 노숙인, 한부모 복지시설 등 보강



#### ‘생활 안전 인프라 개선’

-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인프라 확충
-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



#### ‘미세먼지 대응’

- ✓ 도시숲 조성,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 ✓ 도시바람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전기차 충전기, 수소차 충전소



#### ‘신재생에너지 확대’

- ✓ 태양광·에너지 설치·보급 지원
- ✓ 농가, 협동조합 등 태양광 설치지원, 공공기관 유희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도시재생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안)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

18





## 노후주거지 노후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 자료 : 국토교통부

### 주요 전략과 세부 추진방향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 공급 전략 마련,  
국가최소기준 정비 및 현황조사 실시

기초생활인프라공급기반마련

<5대 기초생활인프라>



공공이공급하는 기초생활인프라공급  
재정지원, 주택도시보증기금, 저리융자

지자체는 국가적 최저기준 이상의 지역여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공급목표를 활성화계획에 반영

####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한 주거지 관리  
공동체토지신약(CLT)을 통한 빈집 정비

소규모·블록형 정비 활성화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축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인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 플랫폼인  
협동조합 구성 지원

#### 주거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완화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존 거주자 등지 내몰림 최소화

뉴딜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노후주거지 정비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

재건축주택 매입 약정

집수리 연계형 장기 전세 임대

노후주택 입체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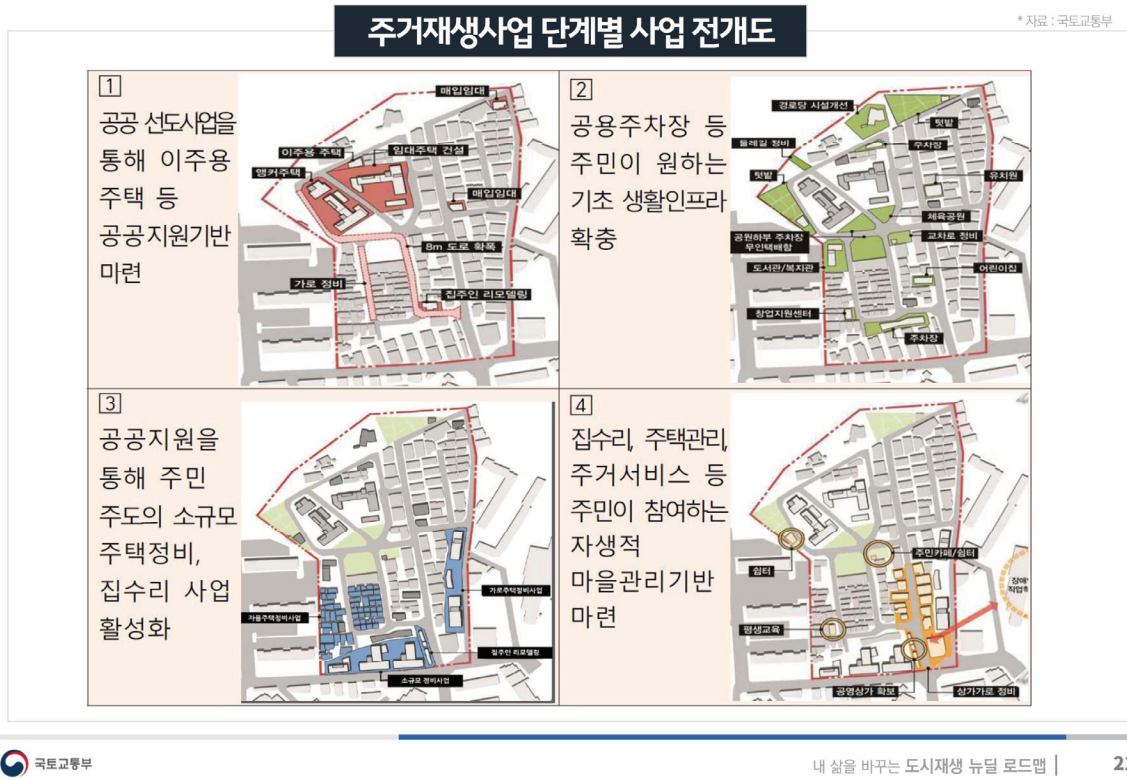
## 노후주거지

# 노후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 노후주거지

# 노후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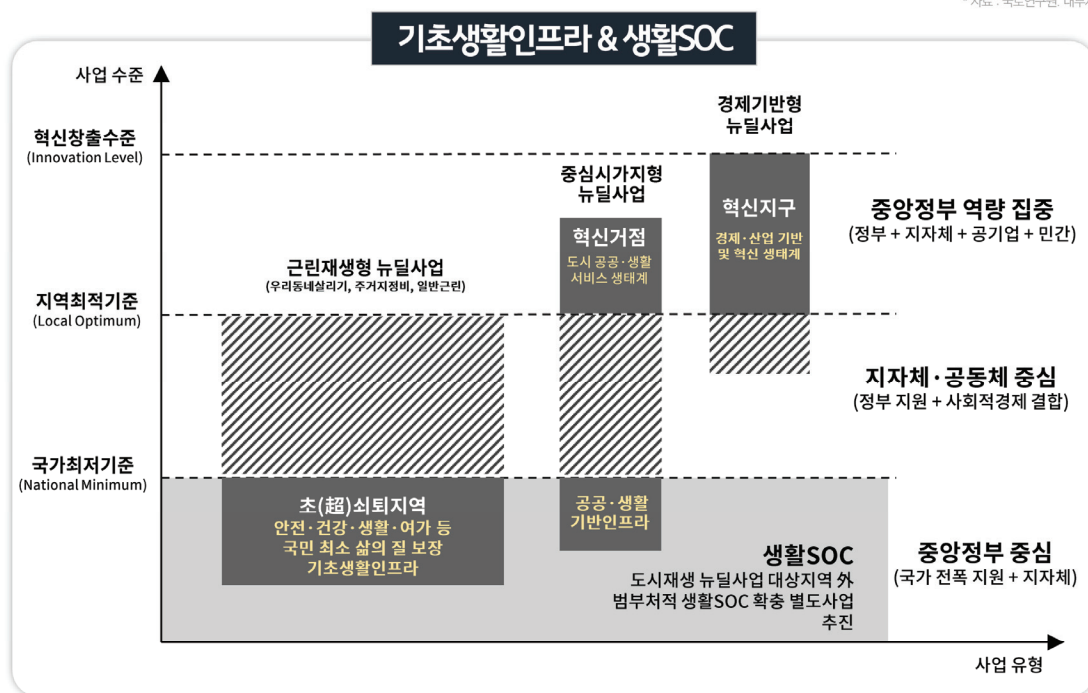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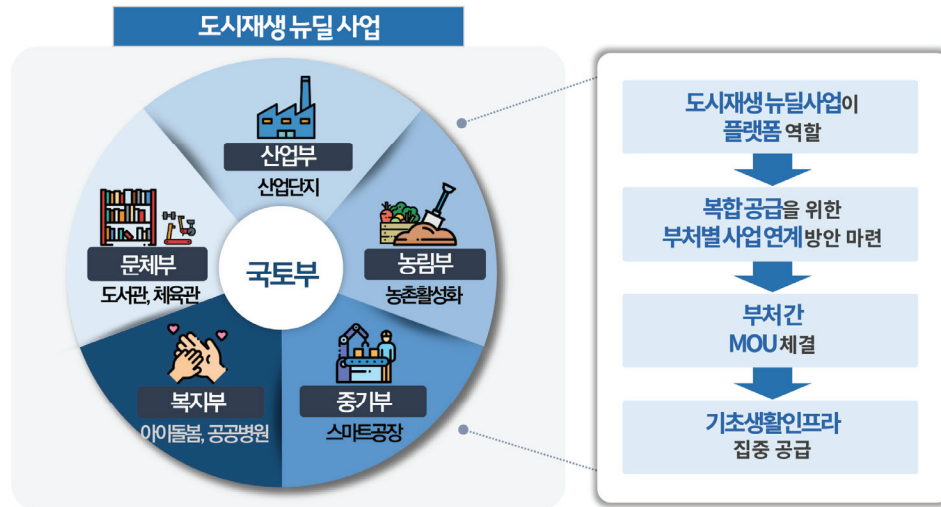
##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방안

### 기초생활인프라와 생활SOC 공급 개념

\* 자료 :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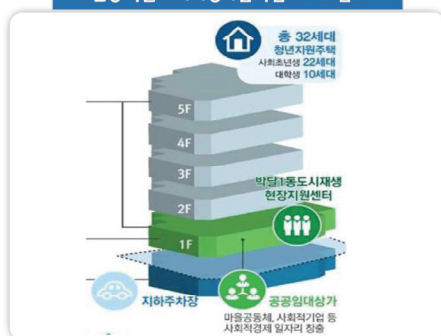
-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부지 확보)** '17년 및 '18년 旣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활용 및 지원
- **(기초생활인프라 부족 지역 우선 선정)** 신규 뉴딜사업 선정 시 **부족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집중 공급
-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인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아니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개별 생활SOC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 ② 공공기관의 공급 참여

거점지역 및 마을단위에 공급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예산, 부지확보, 관리문제를 감안하여 복합 공급”**

-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비지원(50억~250억원), 지자체 매칭 예산, 주택도시 기금 출.용자, 공기업 투자 지원**
- (포항 흥해읍 사업 사례)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송들레길 주차장, 개방형공동이용시설** (작은도서관, 체육시설) 설치 등

〈인양박달 도시재생사업 복합SOC조감도〉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사업 복합SOC조감도〉



## ② 공공기관의 공급 참여

공공기관의 공급과 범부처 참여 유도 연계  
“공기업 복합시설 건설 후 소관 부처에 분양”

- **(소관 부처 및 민간 참여)** 공기업이 도시재생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 저리융자 실시 및 공공임대상가를 활용하여 민간이 공급하는 방안 추진
- 국공유지 활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빈집 매입 등 다양한 공급방안 추진



▶ 복합건설지에 대한 종상향 등 인센티브 필요, 도시재생법 개정 추진

### ③ 민관협업(PPP)형 공급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유형·무형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체계 구축  
**“공기업,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플랫폼 역할 수행”**

- **(총괄사업관리자)** 공기 지자체의 위임에 따라 공기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의 총괄관리, 시행 및 운영관리까지 담당하는 제도(도시재생법 개정 추진중)
- **(민간 사회적 투자 적극 유치)**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는 산업·상업시설을 공급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의 사회적 투자 적극 유치





감사합니다

